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1
----------	------

발의연월일 : 2020. 7. 9.

발 의 자 : 양정숙 · 김승원 · 김경만  
이은주 · 강득구 · 윤관석  
노웅래 · 한준호 · 임종성  
남인순 · 이규민 · 민형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관은 법원이나 검찰에 공탁통지에 필요한 피해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이나 검찰은 제3항에 따른 공탁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관에게 피해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형사공탁 절차,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 출급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u></p> <p><u>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관은 법원이나</u></p>

검찰에 공탁통지에 필요한 피해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이나 검찰은 제3항에 따른 공탁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관에게 피해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형사공탁 절차,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 출급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